

# “혁신도시 양보했으니 광주로” “전남 와야 혁신도시와 시너지”

## 시·도 뜨거운 한전공대 유치전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광주와 전남이 각각 3곳씩, 모두 6곳을 후보지로 신청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전공대가 국내 에너지 산업의 핵심 연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한전공대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 에너지 관련 연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공대 추진 부지와 관련해 광주시는 산학연 연계·인프라·활용성·물리적 환경에서 앞서고, 전남도는 부지제공 조건·접근성·인허가 용이성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은 “당연히 한전이 위치한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한전공대가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동안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후보지 유치를 뛰어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후보지 선정을 놓고 광주와 전남 지방 자치단체 간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한전공대 설립 주체인 한전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공동 혁신도시 정신을 살려 광주로”=최근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는 과거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광주의 양보를 통해 나주에 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만큼, 한전공대는 광주로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혁신도시 조성은 전국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 모범 사례로 꼽혀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이 나주에 입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해마다 징수되는 지방세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전공대 유치를 통해 과거의 ‘시도 상생’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남구 압촌동 에너지밸리산단, 남구 송촌동 영산강문화관 수변공원, 북구 오룡동 첨단산단 3지구 등 3곳이 후보지다.

에너지밸리산단은 남구 압촌동과 나주

## 3곳씩 후보지 추천 과열 양상

“빼격대는 시도 상생 복원해야”

## 소모적인 논쟁 자제 목소리도

시 남평읍에 거쳐 있으며 전체부지 321만㎡ 중 국공유지 비율이 14.3%다. 에너지밸리산단지역은 현재 78%의 보상이 완료됐고,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과 광역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장점이다.

송촌동 영산강문화관 수변공원은 남구 송촌동과 나주시 노안면에 걸쳐 있다. 159만㎡ 규모이며 국도 13호선 인근이라 접근성이 좋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현재 송촌부 유원지는 국유지로 체육시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첨단산단 3지구는 128만㎡ 규모로, 북구 오룡동·대촌동과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대에 조성돼 있다. 인근의 광주연구개발특구 등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고, 호남고속도로 북광산IC, 송정역 등 광역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전남도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와 2022년 개교 일정 맞추려면 전남이 최적지”=전남도가 추천한 한전공대 후보지는 혁신도시에 인접하거나 근거리에는 있는 3곳이다. 전남도는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직까지 구체적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애초 목표인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최적지로 꼽힌다.

우선 전남도는 오는 2022년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와 건설 인허가 등 대학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용이하고, 땅값이 광주에 비해 저렴한 나주에 한전공대가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혁신도시 인근에 한전공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시즌 2’(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구축)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 대학인 한전공대가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5.18어머니들 한국당 규탄 국회앞 농성 광주 5·18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11일 국회 경내 도로에 앉아 광주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에는 한전 및 계열사, 에너지·ICT 기업, 에너지 연구·교육기관 등이 위치해 있어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산·학·연 클러스터가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산·학·연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성과는 광주와 전남이 고루 나눌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광주권의 GIST(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조선대 등과 전남권의 목포대·순천대·동신대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연구중심대학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는 연구중심대학인 GIST가 존재하지만, 전남에는 연구중심대학이 없다는 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구에는 국립 DGIST가 있고 경북에는 사립 포항공대가 있는데, 광주에 GIST, 전남에 한전공대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광주에 설립된다면 자칫 GIST와 한전공대가 불필요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광주·전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나주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전을 전남에 양보했으니 한

전공대는 광주로 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지역이 광주와 인접한 만큼 그 성과를 이미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근무자 상당수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 이후 광주 남구와 서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한전공대를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대학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는 정치적 반대 논리의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전남도가 당초 합의대로 한전공대 입지는 한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며 “정치·정략적 목적으로 논란을 부풀리거나 소모적 논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해찬 대표 “내달중 북미정상회담 전망”

### 신년 기자회견…“권역별 연동형비례제가 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에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대개 한 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따라 남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은 핵 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에게는 엄하고 국민에게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대화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면서 올해 활동 계획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유치원 3법 관철 ▲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검정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의원정수는 가능한 한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 하는 사람들”이라며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설 前 개각 어려울 듯…靑 “검증시스템상 어렵다”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교체 거론

대통령 비서진 2기 출범에 맞물린 개각이 설 연휴(다음 달 2~6일) 이전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각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설 전에 개각하려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미 유력(후임) 주자들이 언론에 다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검증 과정에서 언론이 한마평을 다 실을 정도가 돼야 설 전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 연휴까지 “보름이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실상 설 연휴 전 개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장관 중 현역의 원인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

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시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장관 등은 한 번도 정세 및 검찰 개혁 과제 등과 맞물려 교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박능후 보건복지·홍준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교체 여

부가 유동적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정치인 및 초대 장관 부처를 중심으로 후임 후보군에 대한 물색 및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 인사는 일부 공식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